



위기의 건설산업과 대책

최 윤 호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1. 머리말

근대적 의미의 건설산업이 이땅에 소개된지도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외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열사(熱沙)와 미완의 이국땅에서는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인간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대수로를 개통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한국 건설의 저력을 드높인 바 있다. 그 결과 우리 건설산업은 세계 9대 건설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국내총생산(GDP)대비 10.1%, 총 고용대비 7.6%를 차지하는 등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건설산업은 지난 11월 3일 국내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한 11개 건설업체의 퇴출조치와 한국 건설업계를 대표해온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건설산업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건설산업 부진과 침체가 장기화 될 때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IMF 이후 반짝경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국내경제의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며 대량실업을 부추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

협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건설산업의 위기 원인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야기된 것으로 현재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 탈출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다행이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업계의 어려움이 여론화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건설경기의 부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건설업계의 당면위기 극복과 건설산업 공급기반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 건설 투자의 획기적 확대라는 단기적 처방에 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건설산업 위기의 실상

가. 공사일감이 없어 손놓고 있는 업체 수두룩

현재 건설업계가 당면한 최대의 고민은 '공사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97년말 이후 급락해 온 공사물량은 '99년 초부터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는 '98년의 큰폭 감소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이며, 총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IMF 이전의 8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동결, 완공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정부·지자체·공공단체의 신규 공사 발주가 부진하였고 민간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급감, 주택건설 부진등이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체 전망에 의하면 2001년도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9%정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IMF 이전 보다 20% 감소한 수준이며 100조원에 달하던 건설투자도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매년 10%이상씩 감소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5.7%가 감소하여 '97년도 동기대비 78.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감부족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1>)

반면, 이와같은 건설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는 異狀적으로 증가하여 건설 시장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이다. 지난 4월 29일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1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 경험을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자본금 요건에서 건설공제조합 출자 의무를 임의화하자 신규 등록 건설업체가 월평균 403개씩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만도 7,695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의 3분의1이 넘는 2,776개사가 울들어 새로 등록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사당 평균 수주액도 '97년 192억 3천만원에서 올해에는 그 절반 이하 수준인 85억 9천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개별 업체가 느끼는 체감 건설경기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2>)

신규등록 업체수의 단순증가가 문제될 수는 없겠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일반건설 업체 상당수가

<표-1> 최근 건설공사 수주액 및 건설투자액

	'97	'98	'99	2000(E)
일반건설업체 수주액(조원)	74.9	47.1	51.1	59.1
업체 평균 수주액(억원)	192.3	111.9	99.7	85.9
건설투자액(조원,경상가격)	100.7	92.7	84.1	15.3(上)

<표-2> 최근 건설업체수 변동 및 체감지수

	'97	'98	'99	'00.11.말
일반건설업체수(개사)	3,896	4,191	5,144	7,695
건설경기 체감지수(%)	100	58.4	51.7	42.0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업체라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들 Paper company, Handphone company 등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과 불법하도급을 일삼고 있어, 수십년간 성실히 건설업을 영위해 온 다수 건설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영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즉, 부실·부적격 업체가 건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잠식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다.

나. 건설업체는 이제부터 IMF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차별 여신 회수, 회사채 신규발행 곤란 및 만기연장 불허로 우량 건설업체조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총 8,466억원의 주식·회사채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4.8%에 불과한 수준이며 올 11월~12월중 만기 도래되는 회사채만도 약 2조 1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업계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이해부족 및 편견으로 신규대출이 대부분 중단되어 올해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실적(잔액기준)이 총 22조 6,643억원에 그쳐 '97년도말 대비 4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3>)

더욱이 건설업체의 유력한 자금 조달 수단인 공공공사의 선금 지급 실적이 법정 지급률인 20~50%에 미달하는 10.5~31.2%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연간 필요한 예산배정액이 적어 원가 상승, 경영압박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과 해외공사 미수금 및 준



〈표-3〉 금융기관 대출실적 비율

	'97	'98	'99	'00.9말
제조업(%)	50.0	48.5	46.3	46.5
건설업(%)	16.6	10.0	8.8	8.7

※ 전체산업 = 100

농림지 구입비용 등에 약10~15조원이 사장되어 있어 건설업체의 돈가뭄은 이래저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턱없이 부족한 공사 물량에 비해 과다한 업체수로 저가 투찰, 적자 시공 등 과열경쟁이 성행되어 '97년 85.6%였던 공공공사 낙찰율이 올 5월에는 73%대로 낮아져 건설업체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일반건설업체의 총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건설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율이 '98년도의 -3.1%에서 -11.1%로 크게 확대되어, 100억원어치 공사를 하면 11억원의 적자를 보는 밑지는 경영을 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9년도 말 현재 총 건설업체 5,144개사의 30%에 달하는 1,500여개사가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등 건설업체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작년도 건설업계 평균 부채 비율이 관리 대상 대기업체의 적자폭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98년의 437.7%에서 무려 168.2% 포인트가 늘어난 605.9%로 상승,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표-4〉)

다. 퇴출 및 위기설로 해외수주도 격감

우리 건설산업은 제2차 오일 쇼크시 석유 수입 대금의 38% 이상을 해외건설로 흡수하고 경제위기시

〈표-4〉 건설업체 경영지표

	'97	'98	'99	제조업('99)
매출액 경상이익률(%)	△1.0	△3.1	△11.1	1.7
부채비율(%)	569.3	437.7	605.9	214.7

에는 달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위기 때마다 국가 경제를 구해 온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과 국내 건설업체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발주처가 최저가 입찰 공사에 대하여도 정부 및 국책금융기관의 추가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워크아웃(또는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규제와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증 및 보험 인수 기피로 해외건설마저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다. 올 10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731백만불에 불과, 전년동기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겪고 있다(〈표-5〉).

더우기 현대건설사태로 국제신인도가 더욱 악화되자 사전적격심사 탈락(6건), 계약취소 및 보증물수(3건), 심지어는 낙찰이 취소(2건) 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같이 해외에서 국내건설업체의 신인도가 조속히 회복되지 못할 경우 신규수주가 곤란함은 물론 기 시공중인 공사의 시공권 박탈, 보증물수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1965년 첫 해외건설 진출 이래 35년 동안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해외건설 시장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건설산업의 희생과 육성 대책

그동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육성 정책보다는 단발성 정책을 남발하여 오늘날 건설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업계 또한 건설업은 누구나 영위할 수 있으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요행과 로비에 의존한 경영 관행을 답습

〈표-5〉 해외건설 수주실적

	'95	'96	'97	'98	'99	'00.9말
해외건설수주 (백만 USD)	8,508	10,779	14,032	4,055	9,189	4,731
전년동기증감률(%)	14.3	26.7	30.2	△71.1	126.6	△41.6

하여 스스로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선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건설투자를 대폭 늘려 주어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킴으로써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계 또한 기술 개발, 건설경영, 특화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쟁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공공건설 투자 확대가 시급

현재 건설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사 물량의 확대이다.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항상 적정 공사 물량이 있어야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등 공공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숨통을 터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건설업계에 일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도로, 항만 등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이 16.5%로 미국(10.7%), 일본(9.5%)보다 훨씬 높고 최근 3년간 물류비 증가율이 6~9%씩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OC예산증가율은 0.1~5%증가 수준에 머물러 향후 SOC시설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IMD(국제경영원)가 우리나라 SOC경쟁력을 작년(30위)보다 한단계 아래인 31위로 하향평가 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SOC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간

SOC투자를 당분간 GDP대비 20%내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스스로가 90년대 중반이후 SOC 중요성을 감안하여 GDP대비 20%이상 투자증가율을 유지기로 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2~3조원 증액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6>)

아울러 막대한 SOC 투자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 효율과 정부채정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여 왔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 총 45건 중 6개 사업만이 착공된 예에서 볼수 있듯이 실행 단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무원이 적정한 투자 수익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SOC 민자사업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율을 19%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운영수입 90% 보장 및 대출 자산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10~20%로 인하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외국의 예와 같이 각 은행이 정부 보장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표-6> 연도별 SOC 투자액

	'95	'96	'97	'98	'99	'00	비(잠정)
SOC 투자액 (조원)	6.7	8.3	10.3	11.6	13.4	14.1	14.1
증감률(%)	19.5	23.1	24.1	12.6	15.5	5.2	0.1



또한, 주택 구매력이 감소되고 주택 공급 물량도 '97년까지의 연간 약 60만 가구에서 최근에는 그 절반수준인 30만 가구로 급격히 축소됨으로써 향후 2~3년내에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용적률을 100%에서 80%로, 건폐율은 60%에서 40%로 강화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택지공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판교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 불가피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택지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일원에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 조성은 건설경기 부양은 차치 하더라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억제와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주택 보급률이 현재 전국적으로 93%라고 하지만, 수도권 경우 83%로 아직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분양후 준공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서 올해 공공개발 택지를 당초 계획보다 150만평을 추가공급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금과 같이 10만~30만평 크기의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계획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족 등 또다른 난개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 일원에 기반시설을 잘 갖춘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건설업체 여신 탄력 운용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역시 시급하다. 가뜰이나 금융권으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가 지난 11월 3일 부실건설업체 퇴출조치 이후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 공사는 그 특성상 초기 자금 투입 규모가 크고 투자 자금을 대한 회입기간이 길어 건설공사의 각 단계별로 적정한 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발주기관은「국가계약법상」규정되어 있는 의무선금지급비율(20~50%) 만이라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공사 대금 지급시 지체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체료를 부과토록 하는 강력한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 대출이 정작될 때까지 공사대금담보대출특별보증제도의 항구적인 제도화를 모색하고 아울러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차별 여신회수 자체 및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황을 연장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정 평가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정부차원의 강력한 해외 건설 지원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제2의 중동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오일 달러를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성과 수행 능력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신용에 우선하여 자금 및 보증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해외 수주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진출 위크아웃 기업도 주채권은행의 책임 하에 신속한 보증 발급 및 금융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성이 인정된 우량 해외공사는 선수금 보증 및 공사이행 보증의 신속한 발급, 외국 은행을 통

한 현지 금융시국책 또는 우량 은행의 보증 제공이 원활하도록 은행의 충역여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업체는 최근 해외건설 발주가 단순 수주형 발주에서 시공사 금융제공조건 공사, 혹은 BOT 방식의 프로젝트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턴키공사, 민자유치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건설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 부실건설업체 퇴출등 구조조정은 빨리 끝내야

공사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남으로써 수주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금년도 건설공사물량은 '97년 대비 80%수준에 불과하나 금년 들어 월평균 252개사의 신규 건설업체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능력과 자본 능력이 미비한 영세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부실건설업체퇴출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부실건설업체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1차 서면조사 결과 1,967개사가 부실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자본금 등 등록 요건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고 한다.

최근 일본도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업체수 증가가 지속되자 부적격 건설업체의 철저한 배제를 통해 기술과 경영이 우수한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 정비, 자주적 경영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재편 촉진안」을 마련중에 있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아직도 한건 공사 수주로 평생을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업체에 대

한 지속적인 정비와 능력 없는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한 업체만이 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심사시 실적평가제외대상공사 축소등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이 처한 어려움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21세기 건설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건설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각종 입찰제도와 관련법령의 손질을 통해 우량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확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토록 시장 후견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업계 스스로는 시장환경에 맞게 경영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외환 위기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몸집줄이기가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으나 건설산업만이 아직도 외형 위주의 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영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공법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건설업은 업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대형 건설업체는 고도의 기술수준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OFT 부문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중소 건설업체는 핵심 기술 축적을 통한 시공 전문화로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으로써 업계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